

**2025**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 보고서**

2025. 12.





# 제1부



## 2025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 보고서

요약

## I. 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연구윤리 정책 수립 및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

### ■ 조사 대상

2024년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 대학 교원, 2,079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

### ■ 조사 기간

2025년 9월 8일 ~ 9월 23일

### ■ 조사 내용

연구윤리 인식 및 준수, 연구부정 및 부적절행위, 약탈적학술활동·생성형 AI 관련 연구윤리 인식, 연구윤리 정책 인식도 등 33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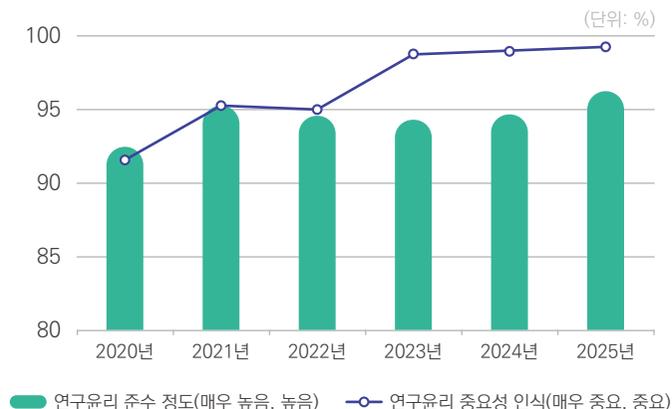
## II. 조사 결과

※ 이하의 내용은 각 조사 결과 전체에 대한 요약이 아닌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조사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연구윤리 인식 및 준수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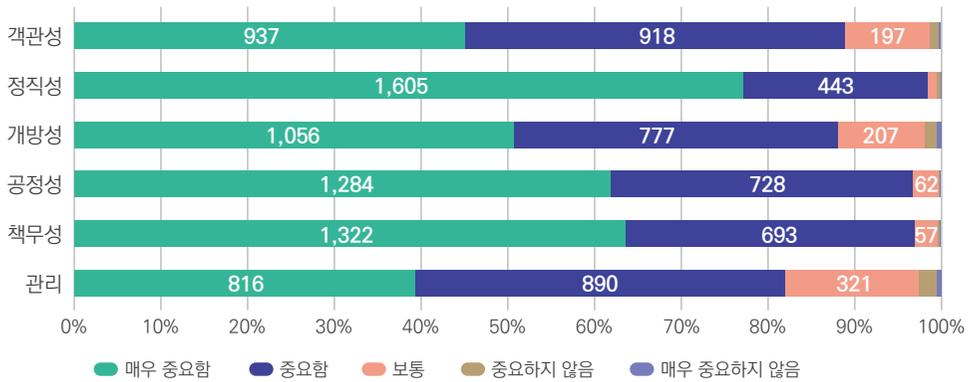
-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 인식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99.32%는 연구윤리 준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15%가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2020년 이후 연구윤리 중요성 인식과 준수 정도 비교



- 개인적/집단적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응답자의 69.79%가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기규율, 학문공동체의 규범과 집단적 관리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6.5%는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기규율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연구윤리 핵심 가치의 중요도는 정직성, 공정성, 책무성, 개방성, 객관성, 관리 순서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정직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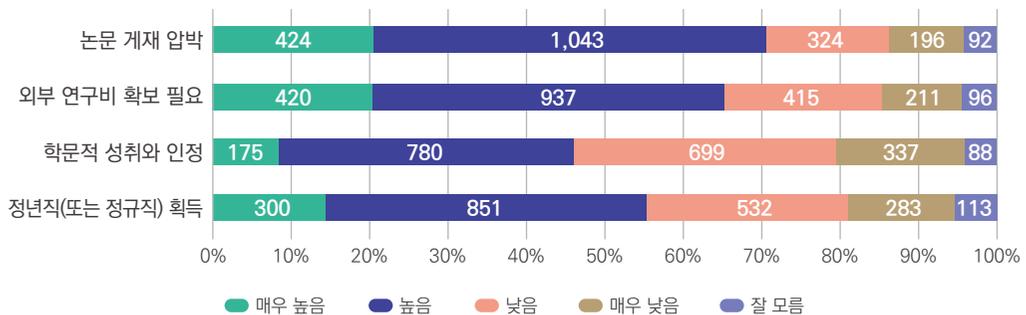
연구윤리 핵심 가치의 중요성 현황



## 2.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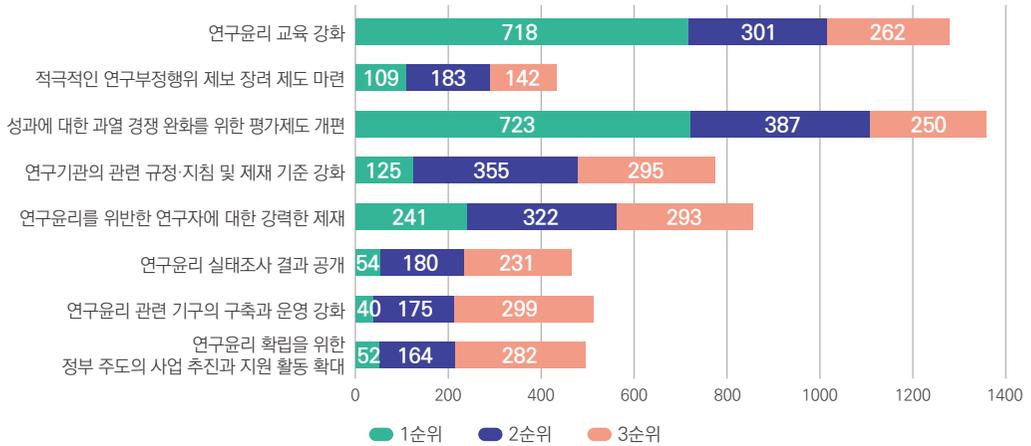
-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논문 게재 압박과 외부 연구비 확보 필요성으로 인한 연구부정행위 영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현황



-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는 평가 제도 개편을 통한 성과에 대한 과열 경쟁 완화와 연구윤리 교육 강화가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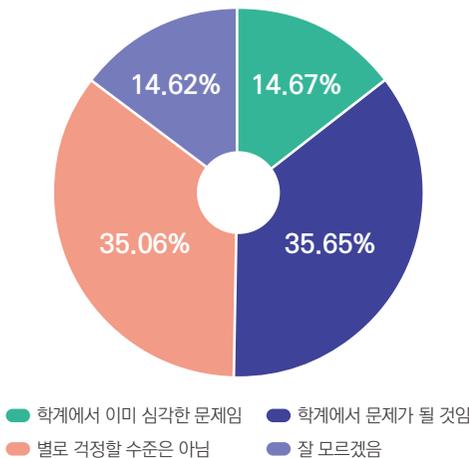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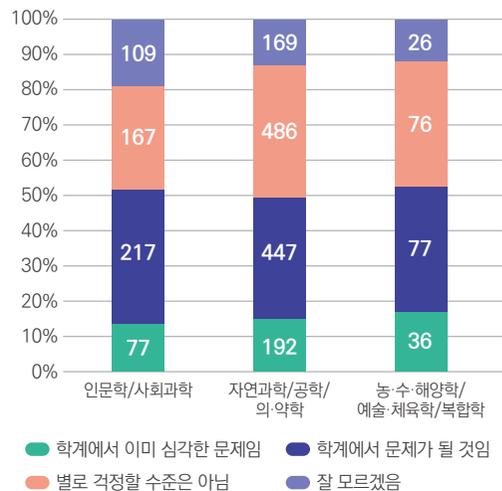
### 3.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인식

-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문제점 인식 비중이 높긴 하나 50.32%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은 35.06%로 조사되었음
- 학문 분야 별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은 3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약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 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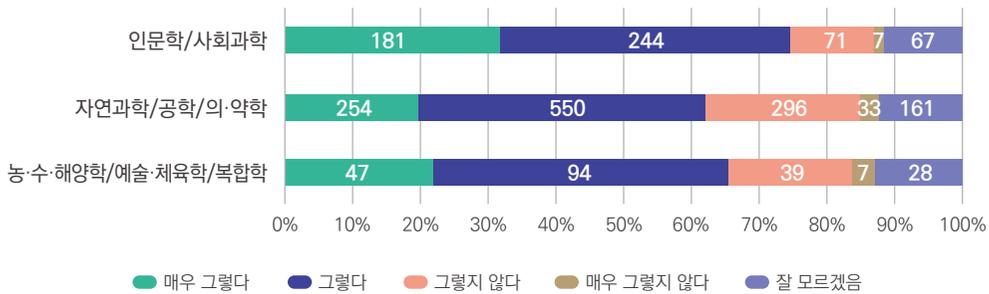


학문 분야별 약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 인식



- 부실의심학술지에 투고 및 출판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비중은 65.9%로 조사되었으며, 연구부정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비중은 21.79%로 조사되었음
- 학문 분야 별로는 인문학/사회과학 분야가 연구부정행위 인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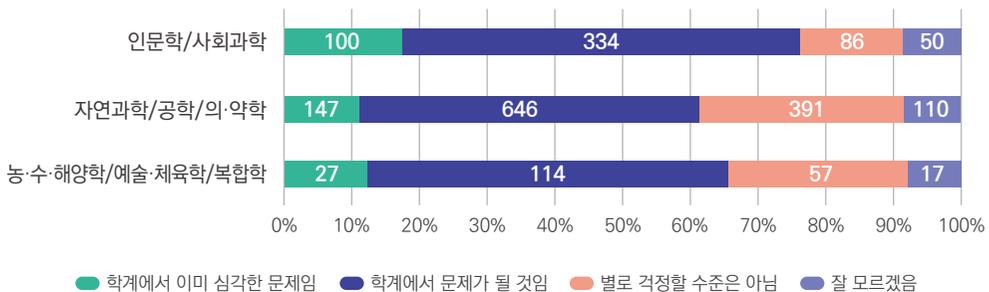
학문 분야별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및 출판 행위의 연구부정행위 인식 현황



#### 4.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 생성형 AI 활용을 연구윤리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65.8%로 조사되었으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은 25.69%로 조사되었음
- 학문 분야 별로는 인문학/사회과학 분야가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에 대한 학문 분야 별 문제점 인식



- 생성형 AI를 연구 활동에 활용하는 비중은 ‘윤문’, ‘선행 연구 검토’, ‘자료 수집 및 구축’, ‘연구 문제 관련 이론’, ‘참고문헌 정리’, ‘자료 분석’, ‘연구설계(절차)’, ‘논문 심사 및 과제 평가’, ‘연구 문제의 생성’ 순서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윤문의 경우 응답자의 95.76%가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음
- 논문 작성 관련,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행위 자체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니지만 (60.75%), 활용 사실을 기술하지 않는 것은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52.14%)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5. 연구윤리 교육/정책 인식 및 제언사항

- 연구윤리 교육 내용과 연구윤리 관련 책자(자료집) 등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 이수 기관으로는 소속기관과 KIRD 등 공공 분야 교육 전문기관, 교육 형태는 온라인(비대면)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언 또는 건의 사항의 핵심 키워드로는 ‘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AI’, ‘제재’, ‘연구환경(문화)’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언 또는 건의 사항 빈출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 제2부



##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 결과

목차

# CONTENTS

##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13
2. 조사 대상 및 응답자 현황	14
3. 조사 내용	16
4. 조사 분석의 한계	16

## II. 조사 결과

1. 연구윤리 인식 및 준수 일반	19
2.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인식	26
3.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인식	32
4.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36
5. 연구윤리 교육/정책 인식 및 제언사항	42

## I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49
2. 정책적 시사점	53

<b>[부록] 2025년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조사 설문지</b>	56
--	----



<표 I -1>	설문 조사 응답자 분포 현황	15
<표 I -2>	대학 교원 대상 연구윤리 인식 조사 항목	16
<표 II -1>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중요성 인식 현황	19
<표 II -2>	2020년 이후 연구윤리 중요성 인식 추이	19
<표 II -3>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19
<표 II -4>	2020년 이후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추이	20
<표 II -5>	개인적/집단적 연구윤리 중요도 인식	20
<표 II -6>	연구윤리 핵심 가치의 중요성 현황	21
<표 II -7>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절차 등 인식 현황	23
<표 II -8>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환경 인식 현황	24
<표 II -9>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발생 수준 현황	25
<표 II -10>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현황	26
<표 II -11>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조치 관련 인식 현황	28
<표 II -12>	연구부정행위 판정이 이뤄진 경우 분야별 제재 관련 인식 현황	29
<표 II -1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견 현황	30
<표 II -14>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인식 현황	31
<표 II -15>	약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 인식 현황	32
<표 II -16>	학문 분야별 약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 인식 현황	33
<표 II -17>	부실의심학술지 판단 근거 현황	34
<표 II -18>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및 출판 행위의 연구부정행위 인식 현황	34
<표 II -19>	학문 분야별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및 출판 행위의 연구부정행위 인식 현황	35
<표 II -20>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방지를 위한 절차 준수 현황	36
<표 II -21>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윤리에 미치는 영향 인식 현황	36
<표 II -22>	2023년 이후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윤리에 미치는 영향 인식 변화	37
<표 II -23>	학문 분야별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윤리에 미치는 영향 인식 현황	37
<표 II -24>	생성형 AI의 연구 활동 활용 현황	38
<표 II -25>	생성형 AI 활용 논문 작성/심사·평가 수행 관련 연구윤리 위반 인식 현황	39
<표 II -26>	논문 작성 시 생성형 AI 활용 권고사항에 대한 인식 현황	40
<표 II -27>	연구 활동에서 생성형 AI 활용의 유용성 인식 현황	41
<표 II -28>	연구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현황	41
<표 II -29>	연구윤리 교육 이수 기관 현황	42
<표 II -30>	연구윤리 교육 형태 현황	42
<표 II -31>	연구윤리 교육 만족도 현황	43
<표 II -32>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활동지원사업 인식 현황	43
<표 II -33>	연구윤리 관련 발간자료 유용성 인식 현황	44



<그림 II-1>	2020년 이후 연구윤리 중요성 인식과 준수 정도 비교	20
<그림 II-2>	연구윤리 핵심 가치의 중요성 현황	22
<그림 II-3>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현황	27
<그림 II-4>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인식 현황	31
<그림 II-5>	악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 인식 현황	32
<그림 II-6>	학문 분야별 악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 인식 현황	33
<그림 II-7>	학문 분야별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및 출판 행위의 연구부정행위 인식 현황	35
<그림 II-8>	학문 분야별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윤리에 미치는 영향 인식 현황	37
<그림 II-9>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언 또는 건의 사항 빈출 키워드 현황	46
<그림 II-10>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언 또는 건의 사항 빈출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46



#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응답자 현황
3. 조사 내용
4. 조사 분석의 한계

# I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연구윤리 정책 수립 및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 의식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였음
  - 현대사회의 연구윤리는 단순히 연구자 개인의 내적 윤리를 넘어서는 사회 전반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본질적으로 연구윤리는 학문의 자유에 기반하는 자율성을 전제하고 있어 국가의 일방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한편, 학문 분야의 다양화에 따라 학문 기관도 다원화되었지만 대학은 여전히 학문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그 구성원인 대학 교원 또한 학문공동체를 구성하는 주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인식 수준을 조사하는 것은 단순히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학문공동체 전반에 걸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규제 등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본 조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정례 조사의 성격을 지니며, 구체적으로는 연구윤리 전반에 관한 인식, 현황, 실천 수준에 대한 연구자 본인, 동료, 소속기관의 실태를 조사하였음
  - 연구윤리 이슈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본 조사는 부실의심학술활동(약탈적 학술활동),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구 활동 등 최신 연구윤리 이슈를 반영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윤리 정책 수립, 규제 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2. 조사 대상 및 응답자 현황

###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2024년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한 대학 교원 응답자 2,112명
- 조사 기간: 2025년 9월 8일 ~ 9월 23일
- 조사 기관: 한국연구재단
- 조사 방법: 한국연구재단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조사(이메일)

### ▣ 조사 응답자

- 조사 기간 총 응답자 수는 2,112명에 해당하나, 불성실 응답자 33명을 제외한 2,079명의 응답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520명(73.11%), 여성 559명(26.89%)으로 남성 교원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30대 이하 120명(5.77%), 40대 728명(35.02%), 50대 894명(43%), 60대 이상 337명(16.21%)으로, 50대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응답자의 신분은 조교수 247명(11.88%), 부교수 559명(26.89%), 정교수 1,130명(54.35%), 기타 143명(6.88%)으로 정교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의 재직기관 유형은 국·공립 863명(41.51%), 사립 1,209명(58.15%), 기타 7명(0.34%)으로 비교적 국·공립과 사립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학 유형으로는 4년제 대학 2,008명(96.58%), 전문대학 17명(0.82%), 대학원대학 54명(2.6%)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4년제 대학의 교원인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의 소속 학과로는 인문학 274명(13.18%), 사회과학 296명(14.24%), 자연과학 399명(19.19%), 공학 556명(26.73%), 의·약학 339명(16.31%), 농·수·해양학 107명(5.15%), 예술·체육학 70명(3.37%), 복합학 38명(1.83%)으로 공학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1-1> 설문 조사 응답자 분포 현황

	구분	응답 수(명)	비율(%)
성별	남성	1,520	73.11
	여성	559	26.89
	소계	2,079	100
연령	30대 이하	120	5.77
	40대	728	35.02
	50대	894	43
	60대 이상	337	16.21
	소계	2,079	100
신분	조교수	247	11.88
	부교수	559	26.89
	정교수	1,130	54.35
	기타	143	6.88
	소계	2,079	100
재직기관	국공립	863	41.51
	사립	1,209	58.15
	기타	7	0.34
	소계	2,079	100
학교 유형	4년제 대학	2,008	96.58
	전문대학	17	0.82
	대학원대학	54	2.6
	소계	2,079	100
박사학위 취득 연도	5년 미만	52	2.5
	5년 이상 10년 미만	313	15.06
	10년 이상 20년 미만	840	40.4
	20년 이상 30년 미만	665	31.99
	30년 이상	209	10.05
	소계	2,079	100
소속 학과	인문학	274	13.18
	사회과학	296	14.24
	자연과학	399	19.19
	공학	556	26.73
	의·약학	339	16.31
	농·수·해양학	107	5.15
	예술·체육학	70	3.37
	복합학	38	1.83
	소계	2,079	100

### 3. 조사 내용

#### ▣ 대학 교원 대상 연구윤리 인식 수준

- 조사내용
  - 문항 수: 33개 문항
  - 세부항목: 연구윤리 인식 및 준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윤리 교육 참여 현황 및 만족도, 정부의 연구윤리 정책 인식도 등에 대한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 등

<표 1-2> 대학 교원 대상 연구윤리 인식 조사 항목

설문 영역	주요 설문 내용
1.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신분, 재직 기관 유형, 학교 유형, 학위 취득 시점, 학과 계열
2. 연구윤리 인식 및 준수	- 연구자의 윤리 실천 및 실행의 중요성 준수 수준 - 연구윤리 준수의 개인적/집단적 중요도 인식 -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핵심 가치의 중요성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 소속기관 내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발생 수준 - 연구부정행위의 영향 요인 및 영향력 - 약탈적 학술 활동 및 생성형 AI에 대한 연구윤리 인식 -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인식 -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활용 수준, 문제점
3.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제도의 구축·운영·예방 현황 -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우선 순위 -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인식 여부
4. 연구윤리 교육 및 만족도	- 연구윤리 교육 경험 여부 -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만족도
5. 정부의 연구윤리 정책 인식	- 정부의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활동지원 사업 인지 수준 및 만족도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위 조사 항목 구분과 조사 결과 분석에서 활용한 항목 구분은 차이가 있음

### 4. 조사·분석의 한계

- 본 조사 결과는 모든 대학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2024년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한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이므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조사 결과와 실제 연구윤리 준수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2025**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 보고서**



# 조사 결과

1. 연구윤리 인식 및 준수 일반
2.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인식
3.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인식
4.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5. 연구윤리 교육/정책 인식 및 제언사항

# II 조사 결과

## 1. 연구윤리 인식 및 준수 일반

### 1)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 인식 및 수준

- 연구 활동 중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중요성 인식 여부와 그 정도, 개인적/집단적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여부를 조사하였음
-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 인식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99.32%는 연구윤리 준수가 ‘매우 중요함’ 또는 ‘중요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 결과인 99%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임

<표 II-1>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중요성 인식 현황

구분	단위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합계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 인식 여부	명	1,540	525	11	1	2	2,079
	%	74.07	25.25	0.53	0.05	0.1	100

<표 II-2> 2020년 이후 연구윤리 중요성 인식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우 중요함’ ‘중요함’ 응답 비중	91.5%	95.2%	95%	98.9%	99%	99.32%

-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15%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 결과인 94.7% 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임

<표 II-3>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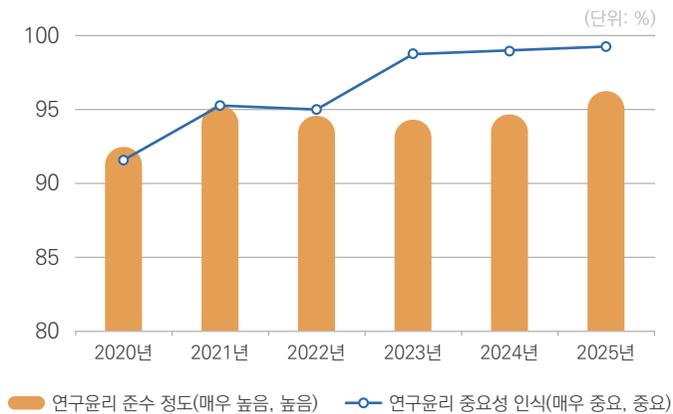
구분	단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합계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명	1,124	875	78	2	-	2,079
	%	54.06	42.09	3.75	0.1	-	100

<표 II-4> 2020년 이후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우 높음' '높음' 응답 비중	92.3%	95.2%	94.6%	94.4%	94.7%	96.15%

-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중요성 인식 현황과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추이를 비교해 보면, 연구윤리 준수 정도에 있어 '보통' 이하 응답이 3.85%에 해당하여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중요성 인식 여부와 실제 준수 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2022년 조사 이후 유사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1> 2020년 이후 연구윤리 중요성 인식과 준수 정도 비교



- 개인적/집단적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응답자의 69.79%가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기규율, 학문공동체(학교, 기관, 학회 등)의 규범과 집단적 관리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6.5%는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기규율이 연구윤리 준수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II-5> 개인적/집단적 연구윤리 중요도 인식

구분	단위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기규율이 더욱 중요함	학문공동체의 규범과 집단적 관리가 더욱 중요함	개인적/집단적 관리 모두 동등하게 중요함	잘 모르겠음	합계
개인적/집단적 연구윤리 중요도 인식	명	551	71	1,451	6	2,079
	%	26.5	3.42	69.79	0.29	100

## 2) 연구윤리 핵심 가치의 중요성

- 연구윤리 핵심 가치를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공정성, 책무성, 관리 총 6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 핵심 가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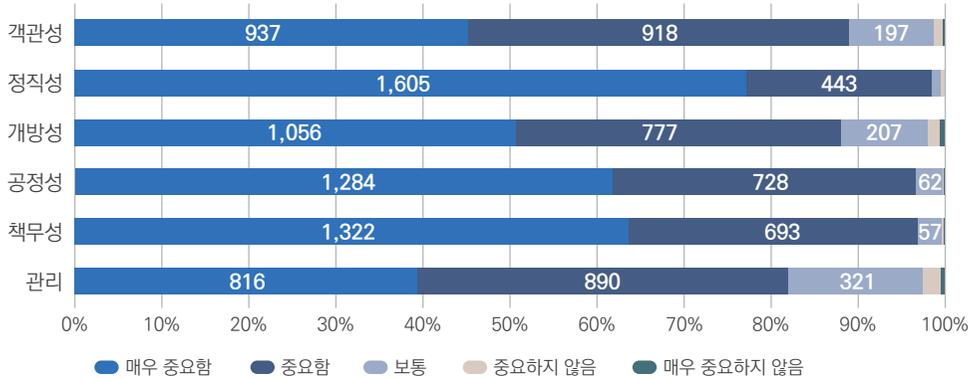
- ① 객관성: 특정한 동기가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② 정직성: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활용하고 보고해야 함
- ③ 개방성: 연구 수행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④ 공정성: 연구자원 분배, 평가 등에서 친분,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⑤ 책무성: 연구 수행 과정과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⑥ 관리: 연구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학문공동체를 운영해야 함

- 핵심 가치 중 '매우 중요함'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정직성 77.2%로 나타났으며, 책무성 63.6%, 공정성 61.76%, 개방성 50.79%, 객관성 45.07%, 관리 39.25% 순으로 조사됨

<표 II-6> 연구윤리 핵심 가치의 중요성 현황

구분	단위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합계
객관성	명	937	918	197	20	7	2,079
	%	45.07	44.16	9.48	0.96	0.33	100
정직성	명	1,605	443	22	8	1	2,079
	%	77.2	21.31	1.06	0.38	0.05	100
개방성	명	1,056	777	207	26	13	2,079
	%	50.79	37.37	9.96	1.25	0.63	100
공정성	명	1,284	728	62	3	2	2,079
	%	61.76	35.02	2.98	0.14	0.1	100
책무성	명	1,322	693	57	3	4	2,079
	%	63.6	33.33	2.74	0.14	0.19	100
관리	명	816	890	321	41	11	2,079
	%	39.25	42.81	15.44	1.97	0.53	100

<그림 II-2> 연구윤리 핵심 가치의 중요성 현황



### 3)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 (1) 일반

■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의 인식 현황을 개인적/집단적 측면에서 조사하였음

- 각 응답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인적/집단적 측면에서 모두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정의와 종류를 잘 알고 있다는 의견의 ‘매우 동의’와 ‘동의’ 응답 비중은 개인적 측면에서 86.05%, 집단적 측면에서 74.22%로 조사됨
  -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견의 ‘매우 동의’와 ‘동의’ 응답 비중은 개인적 측면에서 82.34%, 집단적 측면에서 71.37%로 조사됨
  -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지하는 편이라는 의견의 ‘매우 동의’와 ‘동의’ 응답 비중은 83.46%로 조사됨

<표 II -7>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절차 등 인식 현황

구분		단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비동의	매우 비동의	합계
개인	연구부정행위 정의와 종류를 잘 알고 있음	명	743	1,046	252	32	6	2,079
		%	35.74	50.31	12.12	1.54	0.29	100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잘 이해하고 있음	명	651	1,061	326	39	2	2,079
		%	31.31	51.03	15.68	1.88	0.1	100
집단	소속기관 연구자들은 연구부정행위 정의와 종류를 잘 알고 있음	명	442	1,101	451	74	11	2,079
		%	21.26	52.96	21.69	3.56	0.53	100
	소속기관 연구자들은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잘 이해하고 있음	명	431	1,053	507	81	7	2,079
		%	20.73	50.64	24.39	3.9	0.34	100
	소속기관 연구자들은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지지하는 편임	명	542	1,193	304	30	10	2,079
		%	26.07	57.39	14.62	1.44	0.48	100

(2) 연구윤리 환경

■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환경에 대한 인식을 <표 II -8>의 구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각 구분 모두 ‘보통’의 응답 비중이 높고 ‘낮음’과 ‘매우 낮음’의 응답 비중이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각 구분의 ‘매우 높음’과 ‘높음’의 응답 비중은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소속기관의 원칙과 검증 절차가 효과적임 68.06%,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함 66%, 연구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46.57%로 조사됨

<표 II-8>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환경 인식 현황

구분	단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합계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소속기관의 원칙과 검증 절차가 효과적임	명	427	988	557	84	23	2,079
	%	20.54	47.52	26.79	4.04	1.11	100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함	명	427	945	578	88	41	2,079
	%	20.54	45.46	27.8	4.23	1.97	100
연구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명	255	713	824	215	72	2,079
	%	12.27	34.3	39.63	10.34	3.46	100

### (3)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발생 수준

■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발생 수준을 <표 II-9>의 구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발생 현황에 대해 '매우 빈번'과 '종종'의 응답 비중은 부당한 저자표시 20.97%, 표절 13.71%, 변조 5.82%, 위조 4.81%로 나타나, 특히 부당한 저자표시 문제가 연구부정행위 중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외에도, '매우 빈번'과 '종종'의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행위로는 공동연구 수행 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협의 미실시 23.42%,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부실 21.16%, 부실의심학술지 논문 투고 및 게재 12.89%, 연구팀 내 구성원들 간 갈등(갑질, 폭언, 폭행 등) 10.29% 순으로 조사됨
  - 특히, 공동연구 수행 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협의 미실시는 결과적으로 저자자격 등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부당한 저자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부실의 경우 연구 결과의 재현이라는 본질적인 기능 외에도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발생하는 경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구윤리 측면에서 더욱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II. 조사 결과

<표 II-9>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발생 수준 현황

구분		단위	매우 빈번	종종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잘 모름	합계
위조	명	16	84	847	504	628	2,079	
	%	0.77	4.04	40.74	24.24	30.21	100	
변조	명	14	107	814	514	630	2,079	
	%	0.67	5.15	39.16	24.72	30.3	100	
표절	명	31	254	843	460	491	2,079	
	%	1.49	12.22	40.54	22.13	23.62	100	
부당한 저자표시		명	62	374	837	393	413	2,079
		%	2.98	17.99	40.26	18.9	19.87	100
연구 설계	IRB, IACUC 미준수	명	24	140	755	494	666	2,079
		%	1.15	6.73	36.33	23.76	32.03	100
연구 설계	공동연구 수행 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협의 미실시	명	47	440	818	387	387	2,079
		%	2.26	21.16	39.36	18.61	18.61	100
연구 수행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부실	명	40	400	830	337	472	2,079
		%	1.92	19.24	39.93	16.21	22.7	100
연구 수행	연구비 부정사용	명	20	123	877	685	374	2,079
		%	0.96	5.92	42.18	32.95	17.99	100
연구 수행	연구부정행위 교사 (지시, 강요)	명	18	61	745	805	450	2,079
		%	0.87	2.93	35.83	38.72	21.65	100
연구 수행	실험 참여자 등록의 의도적인 프로토콜 (절차, 지침 등) 위반	명	12	61	764	706	536	2,079
		%	0.58	2.93	36.75	33.96	25.78	100
연구 수행	실험 절차의 의도적인 프로토콜 (절차, 지침 등) 위반	명	12	66	762	693	546	2,079
		%	0.58	3.17	36.66	33.33	26.26	100
연구 성과	부실의심학회 발표 및 참가	명	21	161	778	728	391	2,079
		%	1.01	7.74	37.42	35.02	18.81	100
연구 성과	부실의심학술지 논문 투고 및 게재	명	38	230	755	678	378	2,079
		%	1.83	11.06	36.32	32.61	18.18	100
연구 성과	연구에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 미공개(사사표기)	명	18	132	807	625	497	2,079
		%	0.87	6.35	38.81	30.06	23.91	100
연구 실문화	연구팀 내 구성원들 간 갈등 (갑질, 폭언, 폭행 등)	명	26	188	775	628	462	2,079
		%	1.25	9.04	37.28	30.21	22.22	100
연구 실문화	연구팀 내 구성원들 간 차별 (성별, 나이, 종교 등)	명	20	122	746	747	444	2,079
		%	0.96	5.87	35.88	35.93	21.36	100
연구 실문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미지급 등)	명	13	63	605	993	405	2,079
		%	0.63	3.03	29.1	47.76	19.48	100

## 2.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인식

### 1)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개인적/연구책임자/제도적으로 분류하여 <표 II -10>의 구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개인적 요인 중 특히 논문 게재 압박과 외부 연구비 확보 필요성으로 인한 연구부정행위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책임자나 제도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개인적 요인에 대한 '매우 높음'과 '높음' 응답 비중은 논문 게재 압박 70.56%, 외부 연구비 확보 필요 65.27%, 정년직(또는 정규직) 획득 55.36%, 학문적 성취와 인정 45.94% 순으로 조사되어 개인의 학문적 성취와 인정보다는 논문 게재 압박이나 외부 연구비 확보가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책임자 요인에 대한 '매우 높음'과 '높음' 응답 비중은 책임 연구자가 관리해야 하는 프로토콜(절차, 지침 등)의 숫자 32.56%, 연구에 대한 책임 연구자의 낮은 관심 31.74%, 실험 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의 낮은 관심 30.6% 순으로 조사됨
  - 제도적 요인에 대한 '매우 높음'과 '높음' 응답 비중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미약 31.8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 31.5%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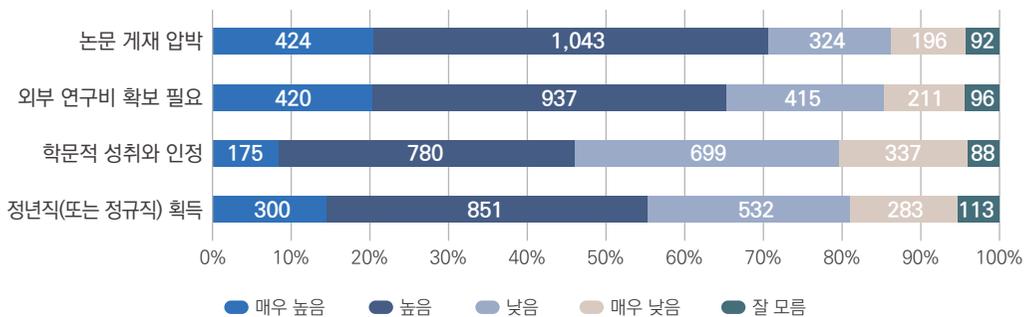
<표 II -10>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현황

구분		단위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잘 모름	합계
개 인 적	논문 게재 압박	명	424	1,043	324	196	92	2,079
		%	20.39	50.17	15.58	9.43	4.43	100
	외부 연구비 확보 필요	명	420	937	415	211	96	2,079
		%	20.2	45.07	19.96	10.15	4.62	100
	학문적 성취와 인정	명	175	780	699	337	88	2,079
		%	8.42	37.52	33.62	16.21	4.23	100
	정년직(또는 정규직) 획득	명	300	851	532	283	113	2,079
		%	14.43	40.93	25.59	13.61	5.44	100

## II. 조사 결과

구분		단위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잘 모름	합계
연구책임자	연구에 대한 책임 연구자의 낮은 관심	명	109	551	808	479	132	2,079
		%	5.24	26.5	38.87	23.04	6.35	100
	실험 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의 낮은 관심	명	86	550	805	469	169	2,079
		%	4.14	26.46	38.71	22.56	8.13	100
	책임 연구자가 관리해야 하는 프로토콜(절차, 지침 등)의 숫자	명	104	573	819	374	209	2,079
		%	5	27.56	39.4	17.99	10.05	100
제도적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	명	103	552	835	477	112	2,079
		%	4.95	26.55	40.17	22.94	5.39	100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미약	명	128	534	794	479	144	2,079
		%	6.16	25.69	38.18	23.04	6.93	100

<그림 II-3>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현황



### 2)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조치 관련 인식

■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조치 관련 인식을 <표 II-11>의 구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전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조치 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매우 잘 알고 있음'과 '약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중은 연구윤리 규정 85.96%,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83.74%로 조사됨
- 실제 조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매우 잘 알고 있음'과 '약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중은 의혹 제보 창구 설치 및 운영 75.81%,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72.92%, 제보 접수 이후 조사·검증 절차 70.18% 순으로 조사됨
- 예방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매우 잘 알고 있음'과 '약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중은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절차 78.07%,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에 대한 대응 절차 71.48%로 조사됨

<표 II -11>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조치 관련 인식 현황

구분		단위	매우 잘 알고 있음	약간 알고 있음	모름	전혀 모름	합계
구축	연구윤리 규정	명	682	1,105	241	51	2,079
		%	32.8	53.16	11.59	2.45	100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명	700	1,041	281	57	2,079
		%	33.67	50.07	13.52	2.74	100
인지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 창구 설치 및 운영	명	569	1,007	425	78	2,079
		%	27.37	48.44	20.44	3.75	100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이후의 조사·검증 절차	명	502	957	533	87	2,079
		%	24.15	46.03	25.64	4.18	100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명	550	966	477	86	2,079
		%	26.46	46.46	22.94	4.14	100
예방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에 관한 사전신고/심사/승인 등 대응 절차	명	522	964	511	82	2,079
		%	25.11	46.37	24.58	3.94	100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검증 절차 등	명	537	1,086	393	63	2,079
		%	25.83	52.24	18.9	3.03	100

### 3) 연구부정행위 판정이 이뤄진 경우 분야별 제재 관련 인식

▣ 연구부정행위 판정이 이뤄진 경우 분야별 제재 관련 인식을 <표 II-12>의 구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전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이 이뤄진 경우 분야별 조치 가능한 제재를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분야별 제재 인식에 대한 ‘매우 잘 알고 있음’과 ‘약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중은 논문 철회, 학술활동 제한 등 학문공동체 내부 제재 94.95%, 징계, 해고, 계약 해지 등 소속기관의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 90.05%, 저작권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개별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행정 제재 84.51% 순으로 조사됨

<표 II-12> 연구부정행위 판정이 이뤄진 경우 분야별 제재 관련 인식 현황

구분		단위	매우 잘 알고 있음	약간 알고 있음	모름	전혀 모름	합계
학문 공동체	논문 철회, 학술활동 제한 등	명	1,246	728	90	15	2,079
		%	59.93	35.02	4.33	0.72	100
법적 제재	저작권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개별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행정 제재	명	845	912	290	32	2,079
		%	40.64	43.87	13.95	1.54	100
소속 기관	징계, 해고, 계약 해지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	명	965	907	182	25	2,079
		%	46.42	43.63	8.75	1.2	100

###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견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 II-13>의 구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연구윤리 교육에 연구윤리 원칙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의 ‘매우 동의’와 ‘동의’ 응답 비중은 85.67%로 조사되어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구부정행위가 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의 ‘매우 동의’와 ‘동의’ 응답 비중은 18.96%, ‘보통’ 35.26%, ‘비동의’와 ‘매우 비동의’는 45.78%로 조사되어 연구부정행위가 흔하지 않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다만, ‘보통’의 비중을 고려하면 반대의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연구 정직성은 책임 연구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의견의 '비동의'와 '매우 비동의'의 응답 비중은 83.55%로 조사되어 연구윤리 핵심 가치로서 정직성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의 지위를 막론하고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구윤리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의 응답 비중은 '매우 동의'와 '동의' 10.68%, '보통' 24.15%, '비동의'와 '매우 비동의' 65.17%로 조사되어 연구윤리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음

<표 II-1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견 현황

구분	단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비동의	매우 비동의	합계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연구윤리의 원칙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명	878	903	257	26	15	2,079
	%	42.24	43.43	12.36	1.25	0.72	100
연구부정행위가 흔하다고 생각함	명	97	297	733	780	172	2,079
	%	4.67	14.29	35.26	37.51	8.27	100
연구의 정직성은 책임 연구자에게만 한정됨	명	53	78	211	886	851	2,079
	%	2.55	3.75	10.15	42.62	40.93	100
연구윤리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함	명	71	151	502	831	524	2,079
	%	3.42	7.26	24.15	39.97	25.2	100

### 5)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인식

▣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표 II-14>의 구분을 기준으로 조사 하였음(중복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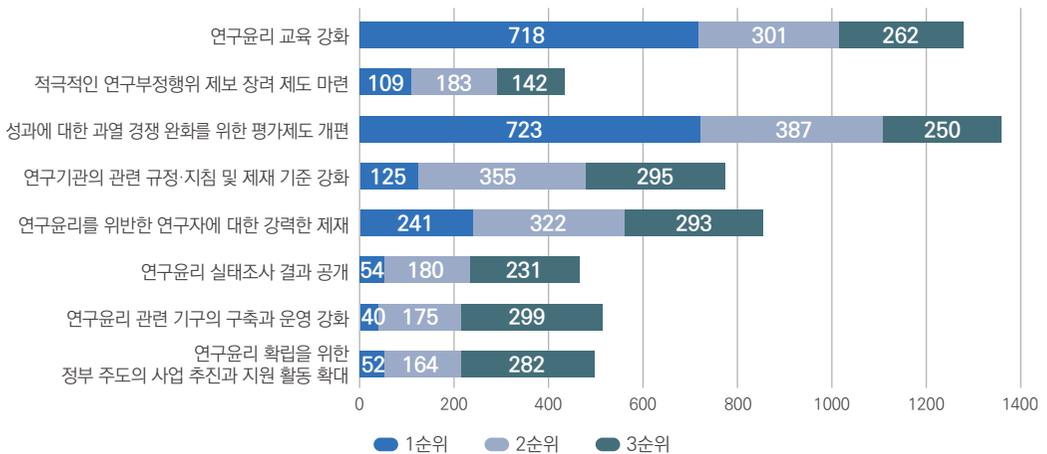
- 다른 정책보다도 특히 평가 제도 개편을 통한 성과에 대한 과열 경쟁 완화와 연구윤리 교육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음
  - 중복 응답 가능한 질의에 대해 1순위 해당 수/총 응답 수는 '성과에 대한 과열 경쟁 완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이 723명/1,36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연구윤리 교육 강화'가 718명/1,281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II. 조사 결과

<표 II -14>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인식 현황

구분	단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연구윤리 교육 강화	명	718	301	262	1,281
	%	11.52	4.83	4.2	20.55
적극적인 연구부정행위 제보 장려 제도 마련	명	109	183	142	434
	%	1.75	2.93	2.28	6.96
성과에 대한 과열 경쟁 완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	명	723	387	250	1,360
	%	11.6	6.2	4.01	21.81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지침 및 제재 기준 강화	명	125	355	295	775
	%	2	5.69	4.73	12.42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명	241	322	293	856
	%	3.86	5.16	4.7	13.72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공개	명	54	180	231	465
	%	0.87	2.89	3.7	7.46
연구윤리 관련 기구의 구축과 운영 강화	명	40	175	299	514
	%	0.64	2.81	4.79	8.24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활동 확대	명	52	164	282	498
	%	0.83	2.63	4.52	7.98
기타	명	17	12	25	54
	%	0.27	0.19	0.4	0.86

<그림 II -4>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인식 현황



### 3.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인식

#### 1) 약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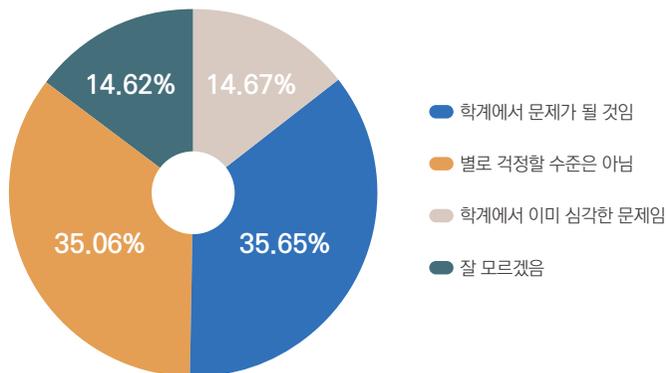
▣ 약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을 <표 II-15>와 같이 조사하였음

-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해 문제점으로 인식(‘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임’)하는 비중이 높긴 하나 50.32%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도 35.0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각 답변의 응답 비중은 ‘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 14.67%,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임’ 35.65%, ‘별로 걱정할 수준은 아님’ 35.06%, ‘잘 모르겠음’ 14.62%로 조사됨

<표 II-15> 약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 인식 현황

구분	단위	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임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임	별로 걱정할 수준은 아님	잘 모르겠음	합계
약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 인식	명	305	741	729	304	2,079
	%	14.67	35.65	35.06	14.62	100

<그림 II-5> 약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 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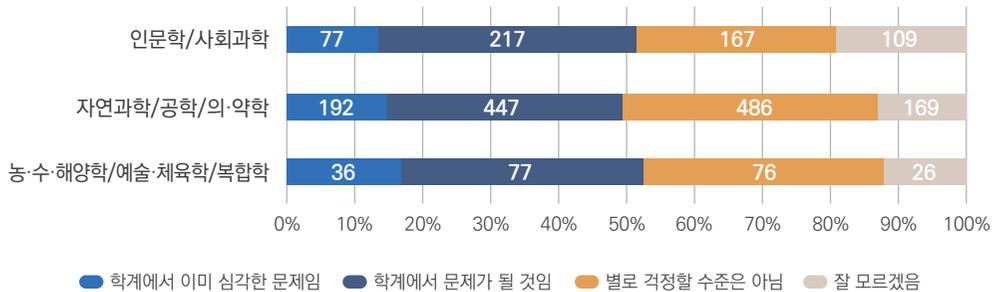


- 학문 분야 별로는 구분 기준을 ‘인문학/사회과학’ 그룹, ‘자연과학/공학/의·약학’ 그룹, ‘농·수·해양학/예술·체육학/복합학’ 그룹으로 나누어 각 답변의 비중을 분석하였음
  - 각 그룹의 답변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점으로 인식(‘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임’,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임’)하는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도 1/3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16> 학문 분야별 약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 인식 현황

구분	단위	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임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임	별로 걱정할 수준은 아님	잘 모르겠음	합계
인문학/사회과학	명	77	217	167	109	570
	%	13.51	38.07	29.3	19.12	100
자연과학/공학/의약학	명	192	447	486	169	1,294
	%	14.83	34.55	37.57	13.05	100
농·수·해양학/예술·체육학/복합학	명	36	77	76	26	215
	%	16.74	35.82	35.35	12.09	100

<그림 II-6> 학문 분야별 약탈적 학술 활동 성행 수준 인식 현황



## 2) 부실의심학술지 판단 근거

- 2024년 동안 부실의심학술지로부터 투고 권유 메일을 받았다고 응답한 1,277명을 대상으로 부실의심학술지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조사하였음
  - 부실의심학술지 판단 근거로는 ‘이메일 초대’ 64.14%, ‘건전학술지원시스템 등 정보 활용’ 21.93%, ‘학술지 홈페이지 등 직접 방문’ 7.28%, ‘동료로부터 인식’ 4.07%, ‘기타’ 2.58%의 순서로 조사됨
    - 기타 의견으로는 ‘이미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부실학술지’라는 답변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17> 부실의심학술지 판단 근거 현황

구분	단위	이메일 초대	동료로부터 인식	학술지 홈페이지 등 직접 방문	건전학술지원 시스템 등 정보자원 활용	기타	합계
부실의심학술지 판단 근거	명	819	52	93	280	33	1,277
	%	64.14	4.07	7.28	21.93	2.58	100

### 3)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및 출판 행위의 연구부정행위 인식

부실의심학술지에 투고 및 출판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음

- 부실의심학술지에 투고 및 출판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인식(‘매우 그렇다’, ‘그렇다’)하고 있는 비중은 65.9%로 조사되어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비중(‘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도 21.79%로 나타나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표 II-18>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및 출판 행위의 연구부정행위 인식 현황

구분	단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음	합계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및 출판 행위의 연구부정행위 인식 여부	명	482	888	406	47	256	2,079
	%	23.18	42.72	19.53	2.26	12.3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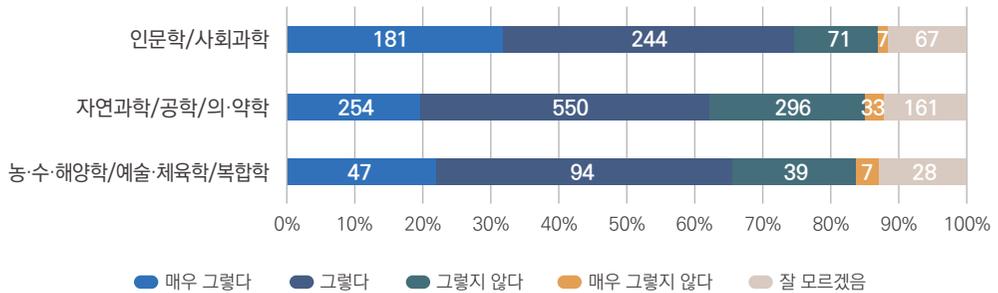
- 학문 분야 별로는 구분 기준을 ‘인문학/사회과학’ 그룹, ‘자연과학/공학/의·약학’ 그룹, ‘농·수·해양학/예술·체육학/복합학’ 그룹으로 나누어 각 답변의 비중을 분석하였음
  - 각 그룹 모두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출판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인식(‘매우 그렇다’, ‘그렇다’)하는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학/사회과학 그룹의 경우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II. 조사 결과

<표 II -19> 학문 분야별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및 출판 행위의 연구부정행위 인식 현황

구분	단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음	합계
인문학/사회과학	명	181	244	71	7	67	570
	%	31.75	42.81	12.46	1.23	11.75	100
자연과학/공학/의약학	명	254	550	296	33	161	1,294
	%	19.64	42.5	22.87	2.55	12.44	100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복합학	명	47	94	39	7	28	215
	%	21.86	43.73	18.14	3.26	13.01	100

<그림 II -7> 학문 분야별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및 출판 행위의 연구부정행위 인식 현황



#### 4)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방지를 위한 절차 준수

▣ 부실의심학술지에 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표 II -20>의 구분을 기준으로 시행 여부를 조사하였음

- 절차 준수 시행 여부에 대한 '예'의 비중으로는 'KCI, SCIE, SCOPUS 등 확인' 90.76%, '본인의 연구 주제와 적합한 학술지인지 검토' 90.43%,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검토' 75.37%, '동료 연구자 등과 논의' 74.65%, '편집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대한 검토' 68.93%, '건전학술지원시스템(SAFE) 등에서 자가점검' 59.55% 순으로 조사됨

<표 II-20>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방지를 위한 절차 준수 현황

구분	단위	시행 여부		합계
		예	아니오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등에서 자가점검	명	1,238	841	2,079
	%	59.55	40.45	100
KCI, SCIE, SCOPUS 등 확인	명	1,887	192	2,079
	%	90.76	9.24	100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검토	명	1,567	512	2,079
	%	75.37	24.63	100
본인의 연구 주제와 적합한 학술지인지 검토	명	1,880	199	2,079
	%	90.43	9.57	100
편집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명	1,433	646	2,079
	%	68.93	31.07	100
동료 연구자 등과 논의	명	1,552	527	2,079
	%	74.65	25.35	100

## 4.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 1)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윤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 II-21>와 같이 조사하였음

- 생성형 AI 활용을 연구윤리에 있어 문제점으로 인식(‘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임’)하는 비중이 6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도 25.6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21>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윤리에 미치는 영향 인식 현황

구분	단위	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임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임	별로 걱정할 수준은 아님	잘 모르겠음	합계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윤리에 미치는 영향	명	274	1,094	534	177	2,079
	%	13.18	52.62	25.69	8.51	100

## II. 조사 결과

- 주목할 점은 2023년 조사 이후 ‘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윤리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표 II-22> 2023년 이후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윤리에 미치는 영향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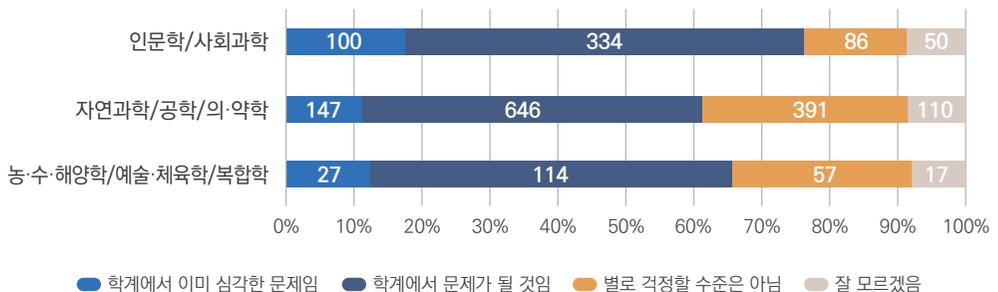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임’ 응답 비중	5.4%	9.1%	13.18%

- 학문 분야 별로는 구분 기준을 ‘인문학/사회과학’ 그룹, ‘자연과학/공학/의·약학’ 그룹, ‘농·수·해양학/예술·체육학/복합학’ 그룹으로 나누어 각 답변의 비중을 분석하였음
  - 각 그룹의 답변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문제점으로 인식(‘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임’,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임’)하는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며, 특히 인문학/사회과학의 경우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II-23> 학문 분야별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윤리에 미치는 영향 인식 현황

구분	단위	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임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임	별로 걱정할 수준은 아님	잘 모르겠음	합계
인문학/사회과학	명	100	334	86	50	570
	%	17.54	58.6	15.09	8.77	100
자연과학/공학/의·약학	명	147	646	391	110	1,294
	%	11.36	49.92	30.22	8.5	100
농·수·해양학/예술·체육학/복합학	명	27	114	57	17	215
	%	12.56	53.02	26.51	7.91	100

<그림 II-8> 학문 분야별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윤리에 미치는 영향 인식 현황



## 2) 생성형 AI의 연구 활동 활용 빈도

▣ 2024년 동안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고 응답한 943명을 대상으로 <표 II-24>의 구분을 기준으로 활용 빈도를 조사하였음

- 생성형 AI를 연구 활동에 활용하는 비중('매우 자주', '가끔')은 '문법, 단어 검토 등 윤문' 95.76%, '선행 연구 검토' 68.93%, '자료 수집 및 구축' 48.57%,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이론' 48.14%, '참고문헌 정리' 41.99%, '자료 분석' 37.43%, '연구설계(절차)' 29.26%, '논문 심사 및 과제 평가' 27.99%, '연구 문제의 생성' 26.72%의 순으로 조사됨
- 특히, '문법, 단어 검토 등 윤문'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비중이 95.7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II-24> 생성형 AI의 연구 활동 활용 현황

구분	단위	매우 자주	가끔	사용하지 않음	전혀 사용하지 않음	합계
연구 문제의 생성	명	42	210	278	413	943
	%	4.45	22.27	29.48	43.8	100
연구설계(절차)	명	37	239	276	391	943
	%	3.92	25.34	29.28	41.46	100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이론	명	79	375	193	296	943
	%	8.38	39.76	20.47	31.39	100
선행 연구 검토	명	185	465	127	166	943
	%	19.62	49.31	13.47	17.6	100
자료 수집 및 구축	명	113	345	199	286	943
	%	11.98	36.59	21.1	30.33	100
자료 분석	명	52	301	248	342	943
	%	5.51	31.92	26.3	36.27	100
문법, 단어 검토 등 윤문	명	548	355	17	23	943
	%	58.11	37.65	1.8	2.44	100
참고문헌 정리	명	114	282	265	282	943
	%	12.09	29.9	28.11	29.9	100
논문 심사 및 과제 평가	명	22	242	292	387	943
	%	2.33	25.66	30.97	41.04	100

### 3) 생성형 AI 활용 논문 작성/심사·평가 수행 관련 연구윤리 위반 인식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 심사, 과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인식을 <표 II-25>의 구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논문 작성 관련, 생성형 AI 활용 행위 자체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이 60.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실을 기술하지 않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52.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한 행위 자체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니지만 활용 사실을 기술하지 않는 것은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보임

<표 II-25> 생성형 AI 활용 논문 작성/심사·평가 수행 관련 연구윤리 위반 인식 현황

구분		단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음	합계
논문 작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명	115	432	1,039	224	269	2,079
		%	5.53	20.78	49.98	10.77	12.94	100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을 기술하지 않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명	304	780	632	127	236	2,079
		%	14.62	37.52	30.4	6.11	11.35	100
논문 심사 또는 과제 평가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은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	명	272	654	756	118	279	2,079	
	%	13.08	31.46	36.36	5.68	13.42	100	

#### 4) 논문 작성 시 생성형 AI 활용 권고사항에 대한 인식

■ 논문 작성 시 생성형 AI 활용 권고사항에 대한 인식을 <표 II-26>의 구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권고사항에 대한 중요성 인식('매우 중요함', '중요함') 중 특히 연구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 'AI가 작성한 내용의 편향성 검토' 81.15%, 'AI 도구가 작성한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78.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외에는 '연구 방법 또는 사사 표기에 AI 도구 활용 명시' 69.12%, '논문 심사 등에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이를 명시' 68.39%, 'AI 도구의 이름, 버전, 질의 날짜 및 시간 등 명시' 45.93%, '사용한 AI 도구 및 구체적인 명령문 명시' 45.79% 순으로 조사됨

<표 II-26> 논문 작성 시 생성형 AI 활용 권고사항에 대한 인식 현황

구분	단위	매우 중요함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합계
연구 방법 또는 사사 표기에 AI 도구 활용 명시	명	525	912	372	89	181	2,079
	%	25.25	43.87	17.89	4.28	8.71	100
사용한 AI 도구 및 구체적인 명령문 명시	명	303	649	647	248	232	2,079
	%	14.57	31.22	31.12	11.93	11.16	100
AI 도구의 이름, 버전, 질의 날짜 및 시간 등 명시	명	304	651	650	250	224	2,079
	%	14.62	31.31	31.27	12.03	10.77	100
AI 도구가 작성한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명	900	731	233	79	136	2,079
	%	43.29	35.16	11.21	3.8	6.54	100
AI 도구가 작성한 내용의 편향성 검토	명	893	794	198	64	130	2,079
	%	42.96	38.19	9.52	3.08	6.25	100
논문 심사 등에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이를 명시	명	589	833	374	97	186	2,079
	%	28.33	40.06	17.99	4.67	8.95	100

### 5) 연구 활동에서 생성형 AI 활용의 유용성 인식

- 연구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표 II-27>의 구분을 기준으로 질의하였음
  -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의 비중은 '연구 수행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84.03%, '연구 수행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75.23%, '연구 질 향상에 도움이 됨' 54.4%,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음' 48.1% 순으로 조사됨

<표 II-27> 연구 활동에서 생성형 AI 활용의 유용성 인식 현황

구분	단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합계
연구 수행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명	617	947	342	121	52	2,079
	%	29.68	45.55	16.45	5.82	2.5	100
연구 수행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명	814	933	242	57	33	2,079
	%	39.15	44.88	11.64	2.74	1.59	100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음	명	306	694	543	390	146	2,079
	%	14.72	33.38	26.12	18.76	7.02	100
연구 질 향상에 도움이 됨	명	358	773	579	270	99	2,079
	%	17.22	37.18	27.85	12.99	4.76	100

### 6) 연구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연구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표 II-28>의 구분을 기준으로 질의하였음(중복 응답 가능)
  -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신뢰성' 35.87%로 조사되었으며, 이외에는 '정보보안' 21%, 'AI 기술 오작동' 17.06%, '편향성' 14.4%, '개인정보 유출' 10.8%, '기타' 0.87% 순으로 조사됨

<표 II-28> 연구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현황

구분	단위	편향성	신뢰성	개인정보 유출	AI 기술 오작동	정보보안	기타	합계
연구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명	743	1,850	557	880	1,083	45	5,158
	%	14.4	35.87	10.8	17.06	21	0.87	100

## 5. 연구윤리 교육/정책 인식 및 제언사항

### 1) 연구윤리 교육 이수 현황

■ 2025년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응답한 1,4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교육이수 기관 현황(중복 응답 가능)으로는 ‘소속기관’이 55.62%로 가장 높았으며, ‘KIRD 등 공공분야 교육 전문기관’이 36.43%, ‘학회 등 학술행사’ 6.67%, ‘민간 분야 교육 전문기관’ 1.17% 순으로 조사됨

<표 II-29> 연구윤리 교육 이수 기관 현황

구분	단위	소속기관	KIRD 등 공공분야 교육 전문기관	민간 분야 교육 전문기관	학회 등 학술행사	기타	합계
연구윤리 교육 이수 기관	명	1,043	683	22	125	2	1,875
	%	55.62	36.43	1.17	6.67	0.11	100

- 교육 형태(중복 응답 가능)로는 ‘온라인(비대면) 교육’이 86.3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오프라인형 특강, 포럼, 워크숍 등 공식 교육’ 13.25%, ‘연구윤리 교육 전문기관의 개인별 컨설팅 및 자문’ 0.43% 순으로 조사됨

<표 II-30> 연구윤리 교육 형태 현황

구분	단위	오프라인형 특강, 포럼, 워크숍 등 공식 교육	온라인(비대면) 교육	연구윤리 교육 전문기관의 개인별 컨설팅 및 자문	합계
연구윤리 교육 형태	명	216	1,408	7	1,631
	%	13.25	86.32	0.43	100

- 교육 만족도는 각 항목에 대한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의 비중이 모두 80%를 상회하여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이해도’ 85.43%, ‘연구윤리 인식 제고’ 83.29%, ‘교육 내용 및 교재의 충실도’ 82.68% 순으로 조사됨

<표 II-31> 연구윤리 교육 만족도 현황

구분	단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교육 내용 및 교재의 충실도	명	387	845	230	22	6	1,490
	%	25.97	56.71	15.44	1.48	0.4	100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이해도	명	439	834	199	15	3	1,490
	%	29.46	55.97	13.36	1.01	0.2	100
연구윤리 인식 제고	명	433	808	224	21	4	1,490
	%	29.06	54.23	15.03	1.41	0.27	100

## 2)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활동지원사업 인식

▣ 교육부가 추진해 온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표 II-32>, <표 II-33>의 구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각 항목에 대한 인지도(‘매우 잘 알고 있음’, ‘약간 알고 있음’) 비중은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실시 및 온라인 콘텐츠 배포(KIRD 주관)’가 81.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는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 등 자료 발간 및 배포’ 80.9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및 개정’ 78.41%,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74.12%, ‘대학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 실시(KIRD 주관)’ 62.81%, ‘연구윤리 포럼 개최’ 60.31%,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운영을 통한 상담 및 자문 제공’ 53.01% 순으로 조사됨

<표 II-32>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활동지원사업 인식 현황

구분	단위	매우 잘 알고 있음	약간 알고 있음	모름	전혀 모름	합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및 개정	명	363	1,267	409	40	2,079
	%	17.46	60.95	19.67	1.92	100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 등 자료 발간 및 배포	명	451	1,232	352	44	2,079
	%	21.69	59.26	16.93	2.12	100

구분	단위	매우 잘 알고 있음	약간 알고 있음	모름	전혀 모름	합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명	344	1,197	483	55	2,079
	%	16.55	57.57	23.23	2.65	100
연구윤리 포럼 개최	명	254	1,000	739	86	2,079
	%	12.22	48.09	35.55	4.14	100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운영을 통한 상담 및 자문 제공	명	228	874	863	114	2,079
	%	10.97	42.04	41.51	5.48	100
대학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 실시(KIRD 주관)	명	342	964	692	81	2,079
	%	16.45	46.36	33.29	3.9	100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실시 및 온라인 콘텐츠 배포(KIRD 주관)	명	600	1,090	341	48	2,079
	%	28.86	52.43	16.4	2.31	100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관련 책자(자료집) 발간 및 배포자료의 유용성에 대한 불만족 인식(‘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6.1%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 -33> 연구윤리 관련 발간자료 유용성 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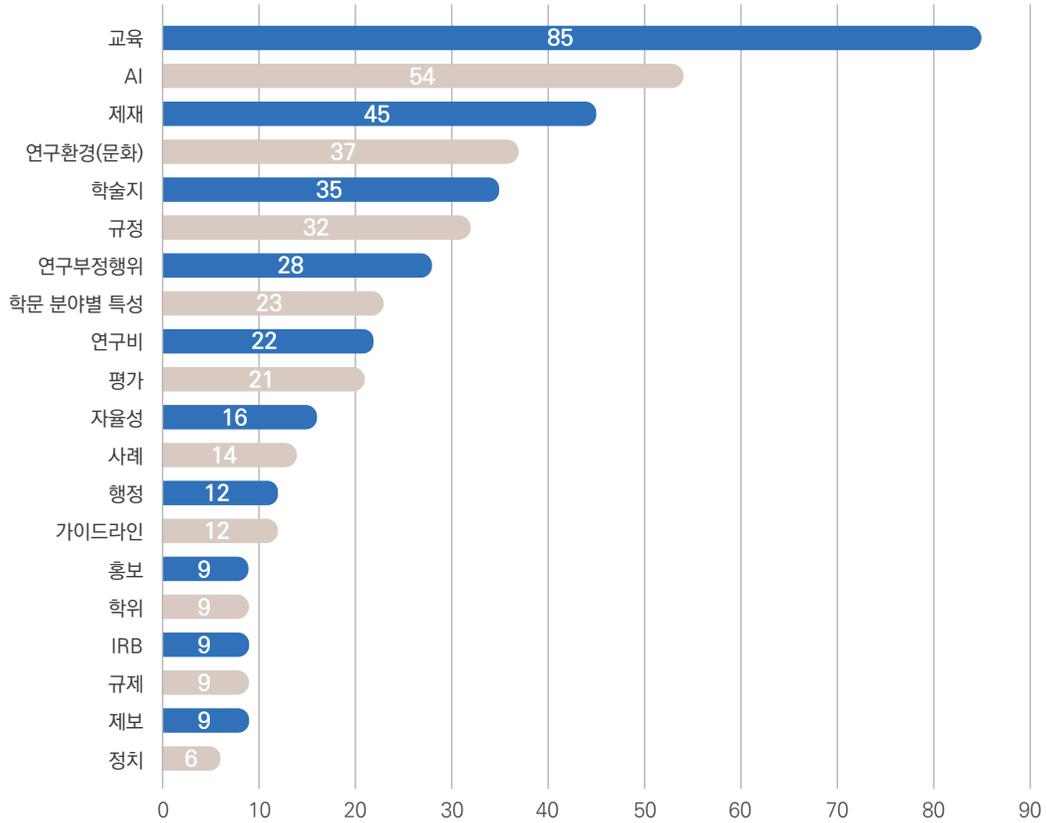
구분	단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관련 발간 자료 유용성	명	181	779	992	103	24	2,079
	%	8.71	37.47	47.72	4.95	1.15	100

### 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언 또는 건의 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언 또는 건의 사항 324건을 분석하였음

- 개방형 질의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불필요한 조사 등을 제거한 후 문장을 단어 중심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쳤음. 또한, 개별 단어의 의미가 맥락적으로 하나의 범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포섭하였음
  - 위조·변조·표절 등 개별적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항은 ‘연구부정행위’로 구분하였음
  - 처벌·제재 등 일련의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에 대한 사항은 ‘제재’로 구분하였음
  - 심사·평가 등 학문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동료심사(peer review)에 대한 사항은 ‘평가’로 구분하였음
  - 개별적인 학문 분야의 특성과 차이로 인한 연구윤리에 대한 사항은 ‘학문 분야별 특성’으로 구분하였음
  - 학계 내부 관행 등의 연구 환경과 문화에 대한 사항은 ‘연구환경(문화)’로 구분하였음
  - 공직자 등의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사항은 ‘정치’로 구분하였음
- 빈출 키워드 상위 20개에 대한 현황은 <그림 II-9>와 같으며, ‘교육’이 85건으로 가장 많음. 이외에는 ‘AI’ 54건, ‘제재’ 45건, ‘연구환경(문화)’ 37건, ‘학술지’ 35건, ‘규정’ 32건, ‘연구부정행위’ 28건, ‘학문 분야별 특성’ 23건, ‘연구비’ 22건, ‘평가’ 21건, ‘자율성’ 16건, ‘사례’ 14건, ‘행정’ 12건, ‘가이드라인’ 12건, ‘홍보’ 9건, ‘학위’ 9건, ‘IRB’ 9건, ‘규제’ 9건, ‘제보’ 9건, ‘정치’ 6건의 순으로 조사됨
  - ‘교육’ 키워드에 대한 의견으로는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른 빈출 키워드인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사례’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AI’ 키워드에 대한 의견으로는 ‘AI 활용 연구윤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 ‘연구 활동에 AI 활용은 문명적 도구 혹은 시대적 흐름으로 접근해야 하며 규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의견 크게 두 가지 의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제재’ 키워드에 대한 의견으로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른 빈출 키워드인 ‘자율성’과 관련하여 ‘과한 제재는 학문 분야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마찬가지로 빈출 키워드인 ‘연구환경(문화)’와 관련하여 ‘제재보다는 근본적인 연구환경(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이외에도 ‘연구비’, ‘평가’, ‘행정’ 등 연구비 지원과 관련한 제도적 관점에서의 개선에 대한 의견과 ‘학술지’, ‘평가’ 등 학술지의 질적 수준·운영 등과 관련하여 부실의심 판단 기준 필요에 대한 의견, 연구윤리 이슈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조사됨

<그림 II-9>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언 또는 건의 사항 빈출 키워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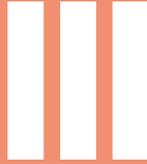


<그림 II-10>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언 또는 건의 사항 빈출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2025**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 보고서**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 결론

#### 1) 연구윤리 인식 및 준수 일반

-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매우 중요함', '중요함' 응답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9.32%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년도(99%)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임
    - 다만,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매우 높음', '높음' 응답 비중)는 이에 못 미치는 96.15%에 해당하여,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실제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2022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적/집단적 측면의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경우 개인적/집단적 측면의 연구윤리 준수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며, 개인적 측면의 연구윤리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게 조사되었음
  -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기규율, 학문공동체의 규범과 집단적 관리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응답은 69.79%로 조사되었으며,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기규율이 더욱 중요하다는 응답은 26.5%로 조사되었음
    - 학문공동체의 규범과 집단적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응답은 3.42%에 불과하여, 학문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탑다운식 연구윤리 정책 설정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핵심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정직성, 책무성, 공정성, 개방성, 객관성, 관리의 순서로 조사되었음
  - 특히, 정직성의 경우 '매우 중요함'의 응답 비중이 77.2%로 조사되어 다른 핵심 가치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진실성이 위반되는 경우 미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자의 높은 연구윤리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됨

-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각 응답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관련 규정과 절차 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발생 수준은 분석 결과의 맥락을 고려하여 후술토록 함)

## 2)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인식

-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구책임자 또는 제도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개인적 요인 중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매우 높음’, ‘높음’ 응답 비중)은 논문 게재 압박이 70.56%로 가장 높았으며, 외부 연구비 확보 필요 65.27%, 정년직(또는 정규직) 획득 55.36%, 학문적 성취와 인정이 45.94%의 순서로 조사되었음
    - 논문 게재 및 연구비 확보 필요성은 정년직(또는 정규직) 획득과도 관련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학문적 성취와 인정보다는 현실적인 연구 실적 측면에서의 압박이 연구부정행위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발생 수준은 부당한 저자표시, 공동연구 수행 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협의 미실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행위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각 발생 수준 비중(‘매우 빈번’, ‘종종’ 응답 비중)에 있어서는 부당한 저자표시가 20.97%, 공동연구 수행 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협의 미실시가 23.42%로 조사되었음
    - 공동연구 수행 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협의 미실시가 저자 자격 등의 문제로 이어져 부당한 저자표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부적절행위 단계에서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조치 사항, 연구부정행위 판정이 이뤄진 경우 분야별 제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로는 성과에 대한 과열 경쟁 완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과 연구윤리 교육 강화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특히 성과에 대한 과열 경쟁은 앞서 서술한 연구부정행위 영향 요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연구부정행위 영향 요인과 동일한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됨

### 3)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인식

- 약탈적 학술 활동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긴 하나,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문제점 인식 비중(‘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임’)이 50.32%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은 35.06%로 조사됨
  - 이러한 인식 분포는 학문 분야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나 약탈적 학술 활동의 문제점 인식에 대한 학문 생태계 전반의 인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이러한 인식 분포가 2018년 WASET & OMICS 이슈가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후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경계성 정책과 학문 생태계 내부의 자정 작용의 결과(예컨대, 연구자 스스로 약탈적 학술 활동을 인지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등)인지는 후속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부실의심학술지 판단 근거로는 이메일 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가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실의심학술지에 투고 및 출판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및 출판 행위의 연구부정행위 인식(‘매우 그렇다’, ‘그렇다’ 응답 비중)은 65.9%로 조사되었으며, 연구부정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비중(‘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 비중)은 21.79%로 조사됨
  - 학문 분야별 연구부정행위 인식 비중은 인문·사회 분야가 74.56%로, 상대적으로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4)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 생성형 AI 활용을 연구윤리에 있어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문제점 인식 비중(‘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임’)이 6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은 25.69%로 조사됨
    - 특히, 2023년 조사 이후 ‘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학문 분야별 생성형 AI 활용의 문제점 인식 비중은 인문·사회 분야가 76.14%로,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생성형 AI의 연구 활동 활용 유형으로는 윤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윤문(95.76%) 외에는 선행 연구 검토가 68.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활용 유형은 대부분 40% 내외의 비중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연구설계(절차)·논문 심사 및 과제 평가·연구 문제의 생성에서의 활용은 단순한 연구 활동의 생산성 증가 차원이 아닌 연구진실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사안으로서 활용에 더욱 유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응답 결과가 30% 이내의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문 생태계 내에서 연구윤리가 자율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기술하지 않는 것은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음

- 생성형 AI 활용 행위 자체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은 60.75%,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실을 기술하지 않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매우 그렇다’, ‘그렇다’)은 52.14%로 조사되었음

■ 연구 활동에서 생성형 AI 활용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연구 수행 작업 속도 향상, 연구 수행 부담 경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신뢰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5) 연구윤리 교육/정책 인식 및 제언사항

■ 연구윤리 교육 내용과 연구윤리 관련 책자(자료집) 등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 이수 기관으로는 소속기관과 KIRD 등 공공 분야 교육 전문기관, 교육 형태는 온라인(비대면)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언 또는 건의 사항의 핵심 키워드로는 ‘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AI’, ‘제재’, ‘연구환경(문화)’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교육’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사례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AI’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AI 활용 연구윤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연구 활동에 AI 활용은 문명적 도구 혹은 시대적 흐름으로 접근해야 하며 규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을 띄고 있음
- ‘제재’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한 제재는 학문 분야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을 띄고 있으며 근본적인 관점에서 제재보다는 연구환경(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외에도 연구비, 평가, 행정 등 연구비 지원과 관련한 제도개선 의견과 학술지의 질적 수준·운영 등과 관련하여 부실의심 판단 기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연구윤리 이슈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조사되었음

## 2. 정책적 시사점

※ 이하는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저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힙니다.

### 1) 연구윤리 규제 정책 설정의 기본 방향

- ▣ 연구윤리는 학문의 자유 보호라는 헌법적 명령에 따라 학문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규제를 보충하는 자율규제 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공법적 구조는 규제 정책 설정에 있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설정으로 이어지게 되며, 참여와 협력에 기반하는 간접적인 규제 체계인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국가-학문기관-연구자로 구성된 거버넌스 3주체 간의 함께 방향잡기(co-steering)가 정책 설정의 지향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 ▣ 위와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도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측면의 중요도 인식 조사 결과는 양 측면 모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학문공동체의 규범과 집단적 관리보다는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기규율이 더욱 강조됨으로써 실증적인 면에서 연구윤리 규제 정책 설정에 있어 국가 또는 학문기관의 일방적인 탑다운식 규제는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 ▣ 연구윤리 규제 정책의 설정은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학문 분야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곧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규제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특정 이슈 중심으로 논의되는 현시점에서는 더욱 이러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주지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

## 2) 연구환경(문화) 개선의 병행

-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 발생 요인의 큰 비중은 개인의 학문적 성취보다는 논문 게재, 연구비 확보 등에 따른 현실적인 측면의 연구 실적 압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 환경이나 문화 측면에서 실적 중심의 과열 경쟁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3) 약탈적 학술 활동 관련 인식 후속 조사

- 2018년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이후, 여전히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경계성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문제점 인식 비중은 꾸준히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중도 30%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인식 비중의 원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새로운 정책 설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4)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 인식 조사 고도화

-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 이슈는 종래 연구 활동에 널리 활용되던 서지 관리, 통계 프로그램 같은 생산성 도구의 차원을 넘어 연구진실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윤리 확보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 조사 결과, 생성형 AI가 이미 학문 분야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활용 유형도 빈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구 활동 전반에 걸쳐 연구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구진실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윤문의 경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연구자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으나, 연구진실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연구문제 생성 등은 활용 빈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향후 조사에서는 활용 유형 세부 항목에 대한 인식 조사 항목을 고도화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 정책 설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5**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 보고서**



## 부록

# 2025년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와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 인식 조사는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생성형 AI, 부실의심학술활동 등)를 반영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에 관한 성과를 측정하고 연구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연구윤리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응답 기관과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오니, 정확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귀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답변은 우리나라 연구윤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기간** 2025년 9월 8일 - 9월 23일

**조사대상**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법무팀

## 1. 기본 정보

※ 다음은 귀하의 기본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의 밑줄 친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___① 남자 ___② 여자
2	연령	___① 20대 ___② 30대 ___③ 40대 ___④ 50대 ___⑤ 60대 이상
3	신분	___① 조교수 ___② 부교수 ___③ 정교수 ___④ 기타
4	재직기관의 유형	___① 국·공립 ___② 사립 ___③ 기타
5	학교 유형	___① 4년제 대학 ___② 전문대학 ___③ 대학원대학
6	박사 학위 취득 시점 (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닌 경우 최종 학위 기준)	___① 5년 미만 ___② 5년 이상 10년 미만 ___③ 10년 이상 20년 미만 ___④ 20년 이상 30년 미만 ___⑤ 30년 이상
7	소속 학과의 계열	___① 인문학 ___② 사회과학 ___③ 자연과학 ___④ 공학 ___⑤ 의·약학 ___⑥ 농·수·해양학 ___⑦ 예술·체육학 ___⑧ 복합학

## 2. 연구윤리 인식 및 수준

※ 다음은 일반적인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및 준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의 밑줄 친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자의 윤리 수준 및 기관 내 연구윤리 문화

8. 귀하는 평소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윤리 준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_\_\_①매우 중요하다 \_\_\_②중요하다 \_\_\_③보통이다 \_\_\_④중요하지 않다 \_\_\_⑤매우 중요하지 않다

9. 귀하가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윤리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매우 높다 \_\_\_②높다 \_\_\_③보통이다 \_\_\_④낮다 \_\_\_⑤ 매우 낮다

10. 귀하가 연구윤리 준수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①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기규율 \_\_\_②학문공동체(학교·기관·학회 등)의 규범과 집단적 관리  
\_\_\_③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학문공동체 집단적 관리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 \_\_\_④ 잘 모르겠다

11. 귀하는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핵심 가치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가치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객관성	특정한 동기가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정직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활용하고 보고해야 함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개방성	연구수행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공정성	연구자원 분배, 연구업적 평가 등에서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책임성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관리	연구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학문 공동체를 운영해야 함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주세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비동의	매우 비동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연구윤리 원칙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부정행위가 흔하다고 생각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의 정직성은 책임 연구자에게만 한정된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윤리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이 흔한 편이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3.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에 대한 귀하와 동료의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비동의	매우 비동의
나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종류를 잘 알고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나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 등을 잘 이해하고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우리 기관의 연구자들은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종류를 잘 알고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우리 기관의 연구자들은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 등을 잘 이해하고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우리 기관의 연구자들은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 등을 지지하는 편이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4.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연구 및 근무 환경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소속 기관의 원칙과 검증 절차가 효과적이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소속 기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5.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가 발생하는 수준을 응답해주세요.

연구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		매우 빈번	종종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잘 모름
데이터 위조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데이터 변조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임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형, 삭제, 왜곡하여 기록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성과물을 활용하면서 출처 미표기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 설계	IRB, IACUC 승인 여부 등 미준수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공동연구 수행 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하지 않음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 수행	연구노트(실험데이터) 작성 및 관리 부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비 부정사용(인건비 착취, 불용장비 구입 등)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부정행위 교사(지시, 강요)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실험 참여자 등록의 의도적인 프로토콜(절차, 지침 등) 위반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실험 절차의 의도적인 프로토콜(절차, 지침 등) 위반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 성과	부실의심학회 발표 및 참가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부실의심학회지 논문 투고 및 게재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에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 미공개(사사 표기)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실 문화	연구팀 구성원들 간의 갈등(갑질, 폭언, 폭행 등)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팀 내 구성원들 간의 차별(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결혼 여부 등)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등)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6.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평가해 주세요.

구분	근무 환경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잘 모름
개인적 요인	논문 게재 압박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외부 연구비 확보 필요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학문적 성취와 인정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정년직(또는 정규직) 획득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 책임자 요인	연구에 대한 책임 연구자의 낮은 관심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실험 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의 낮은 관심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책임 연구자가 관리해야 하는 프로토콜(절차, 지침 등)의 숫자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제도적 요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미약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

17. 약탈적 학술 활동의 성행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_\_① 별로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 \_\_②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 \_\_③ 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이다.
- \_\_④ 잘 모르겠다.

18. 귀하는 지난 2024년 동안 부실의심학술지로부터 투고 권유 메일을 받았습니까?

- \_\_① 예(☞ 19번으로 가십시오) \_\_② 아니오 \_\_③ 잘 모르겠다

19. (위 18번에서 ①에 응답한 분만) 부실의심학술지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이메일 초대로 인해 의심함
- \_\_\_② 동료로부터 알게 됨
- \_\_\_③ 학회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서 알게 됨
- \_\_\_④ 인터넷 조회(건전활동학술지원시스템, 블랙리스트 등)를 통해 알게 됨
- \_\_\_⑤ 기타

20. 부실의심학술지에 투고 및 출판하는 것이 연구부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매우 그렇지 않다 \_\_\_②그렇지 않다 \_\_\_③그렇다 \_\_\_④매우 그렇다 \_\_\_⑤ 잘 모르겠다

21.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시행하십니까?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예	아니오
'건전활동학술지원시스템(SAFE)'등에서 자가점검		
KCI, SCI, SCOPUS 등 논문 검색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검토		
본인의 연구성과 주제와 적합한 학술지인지 검토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동료 연구자 및 조연자 등과 논의		

▶ **생성형 AI와 연구윤리**

22. ChatGPT 등의 생성형 AI가 연구윤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_\_\_① 별로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 \_\_\_②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 \_\_\_③ 학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이다
- \_\_\_④ 잘 모르겠다

23. 귀하는 지난 2024년에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_\_① 예(☞ 24번으로 가십시오) \_\_② 아니오

24. (위 23번에서 ①에 응답한 분만) 생성형 AI를 연구 활동에 쓰는 경우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생성형 AI와 연구 활동	매우 자주 사용	가끔 사용	사용하지 않음	전혀 사용하지 않음
연구 문제의 생성	__①	__②	__③	__④
연구 설계(절차)	__①	__②	__③	__④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이론	__①	__②	__③	__④
선행 연구의 검토	__①	__②	__③	__④
자료 수집 및 구축	__①	__②	__③	__④
자료 분석	__①	__②	__③	__④
문법과 단어의 검토 등의 윤문	__①	__②	__③	__④
참고문헌 정리	__①	__②	__③	__④
논문 심사 및 과제 평가의 활용	__①	__②	__③	__④

25.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연구부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_\_①매우 그렇다 \_\_②그렇다 \_\_③그렇지 않다 \_\_④매우 그렇지 않다 \_\_⑤ 잘 모르겠다

26.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이에 대해 기술하지 않는 것은 연구부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_\_①매우 그렇다 \_\_②그렇다 \_\_③그렇지 않다 \_\_④매우 그렇지 않다 \_\_⑤ 잘 모르겠다

27. 논문 심사 또는 과제의 평가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비밀유지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매우 그렇다 \_\_②그렇다 \_\_③그렇지 않다 \_\_④매우 그렇지 않다 \_\_⑤ 잘 모르겠다

28. 논문 작성에 챗봇, 생성형 AI와 같은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다음의 AI 활용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활용 권고	매우 중요함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연구방법 또는 사사 파트에 AI 도구를 활용하였음을 명시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사용한 챗봇과 구체적인 명령문을 논문에 명시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AI 도구의 이름, 버전,질의 날짜 및 시간 등을 명시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AI 도구가 작성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AI 도구가 작성한 내용에 편향성이 없는지 검토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심사자 및 평가자가 논문 평가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이를 명시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29. 연구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연구과정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연구 수행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 수행의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연구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30. 연구 수행 중 생성형 AI를 활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_\_\_① 데이터 편향성(언어, 인종, 지역, 성별 등 고정관념 투영)
- \_\_\_② 내용의 신뢰성(부정확한 정보 제공)
- \_\_\_③ 개인정보 유출
- \_\_\_④ AI 기술의 오작동
- \_\_\_⑤ 정보 보안(데이터, 연구내용 등의 기밀 유출 등)
- \_\_\_⑥ 기타

### 3.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31. 귀하가 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내외부 기관에 제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구분	연구부정행위 대응 및 제보	매우 잘 알고있음	약간 알고있음	모름	전혀 모름
구축	연구윤리 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알고 있다				
운영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보받을 수 있는 제보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알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 이후 조사·검증 절차에 대해 알고 있다				
예방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알고 있다				
	특수 관계인 연구 참여에 관한 대응절차 (사전신고/심사/승인 등)에 대해 알고 있다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검증절차 등에 대해 알고 있다				

32. 귀하는 연구부정행위 판정이 이뤄지는 경우 크게 다음 3가지 분야에서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구분	제재 예시	매우 잘 알고있음	약간 알고있음	모름	전혀 모름
학문공동체 내부 제재	논문 철회(retraction), 학술활동 제한 등				
법적 제재	저작권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개별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적·행정적 제재				
소속 기관 내부 제재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해고, 계약 해지 등)				

33.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래 보기에서 세 가지를 제시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구분	보기
사전예방 (연구윤리 개념·규정 정비, 교육 강화 및 문화 조성)	1. 연구윤리 교육 강화
	2. 적극적인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장려하는 제도 마련
	3. 성과에 대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편
	4.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지침 및 제재 기준 강화
사후조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실태조사·공개)	5.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
	6. 연구윤리 실태 조사 결과 공개
인프라 구축 (정부·대학의 연구윤리 역량 강화지원)	7. 연구윤리 관련 기구의 구축과 운영 강화
	8.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활동 확대
	9. 기타 (     )

## 4. 연구윤리 교육

※ 다음은 연구윤리 관련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의 밑줄 친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 귀하는 올해(2025년)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35. (위 34번에서 ①에 응답한 분만)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제공 기관은 어디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_\_\_ ① 소속된 대학 등 연구기관

\_\_\_ 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등 공공부문 연구윤리 교육 전문기관

\_\_\_ ③ 민간 교육 전문기관

\_\_\_ ④ 학회 등 학술행사

\_\_\_ ⑤ 기타(            )

36. (위 34번에서 ①에 응답한 분만) 연구윤리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형태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_\_\_ ① 오프라인형 특강, 포럼, 워크숍 등 공식 교육

\_\_\_ ② 온라인 (비대면) 교육

\_\_\_ ③ 연구윤리 교육 전문기관의 개인별 컨설팅 및 자문

37. (위 34번에서 ①에 응답한 분만) 연구윤리 교육을 받았다면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구윤리 관련 교육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교육내용 및 교재의 충실도	___ ①	___ ②	___ ③	___ ④	___ 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이해도	___ ①	___ ②	___ ③	___ ④	___ ⑤
연구윤리 인식 제고	___ ①	___ ②	___ ③	___ ④	___ ⑤

## 5. 정부의 연구윤리 정책평가

※ 다음은 교육부 등의 정부차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의 밑줄 친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8. 귀하는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활동지원사업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활동지원 사업	매우 잘 알고 있음	약간 알고 있음	모름	전혀 모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정과 개정	__①	__②	__③	__④
연구윤리 관련 책자(자료집) 발간 및 배포 (연구윤리 가이드·권고사항,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사례집 등)	__①	__②	__③	__④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__①	__②	__③	__④
연구윤리 포럼 개최	__①	__②	__③	__④
연구윤리정보포털(www.cre.re.kr) 운영을 통한 연구윤리 상담·자문 제공	__①	__②	__③	__④
대학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 실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주관)	__①	__②	__③	__④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실시 및 온라인 콘텐츠 배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주관)	__①	__②	__③	__④

39.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관련 책자(자료집) 발간 및 배포자료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_\_①매우 만족 \_\_②만족 \_\_③보통 \_\_④대체로 불만족 \_\_⑤매우 불만족

40. 기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안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 보고서**

---

**발행처**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법무팀  
**저 자** 김남곤 부연구위원(법학박사)  
**발행일** 2025년 12월  
**디자인** 에코디자인

**ISBN** 979-11-86956-38-0

---

※ 이 책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에 있으며, 무단으로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의 허락없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내용을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